

거대한 전환 BBS 요약본

제6장. 자기조정 시장, 그리고 허구 상품 : 노동·토지·화폐

▶ 시장경제는 '산업의 모든 요소를 위한 시장'이 형성되어야만 성립하고, 이것은 토지와 노동, 화폐 등이 '상품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238

자기조정이라는 말은, 모든 생산은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소득은 그렇게 생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한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산업의 모든 요소를 위한 시장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재화 시장뿐만 아니라 노동·토지·화폐가 판매되는 시장도 포함되며, 그 가격은 각각 상품 가격과 임금·지대·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 이것은 자기조정 시장이 태동하기 시작한 중상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되기 어려운 생각이었다.

중상주의는 국가 정책으로 상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은 시장경제와 정반대였다. (p.240)

▶ 자기조정 시장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이든 그것이 형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소득이든 시장에서의 판매 이외의 방법으로 형성되는 것을 허락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사회를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으로 제도적으로 분리한다는 엄청난 것을 요구한다."

▶ 그러나 "토지·노동·화폐는 분명 상품이 아니다." (p.243)

p.243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인간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이며,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 활동은 생명의 다른 영역과 분리할 수 없으며, 비축할 수도, 사람 자신과 분리하여 동원할 수도 없다. 그리고 토지란 단지 자연의 다른 이름일 뿐인데, 자연은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의 화폐는 그저 구매력의 징표일 뿐이며, 구매력이란 은행업이나 국가 금융의 메커니즘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어떤 것도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토지·화폐를 상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이다.

▶ 상품 허구의 개념

▶ 노동시장이나 토지시장 등은 이러한 '허구의 도움'에 의해서 조직되는 것이며, 만일 그러한 요소 시장이 성립되는 것을 막는다면 "결과적으로 시장 체제의 자기조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된다. 시장경제는 '상품 허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 하지만, “인간과 자연환경의 운명이 순전히 시장 매커니즘 하나에 좌우된다면 결국 사회는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p.244) 인간의 노동은 '생산'이라는 대 전제 아래서 혈값에 사고 팔리는 상품이 되고 만다. 또 "자연은 그 구성 원소들로 환원되어버리고, 주거지와 경관은 더럽혀진다. 또 강이 오염되고, 군사 안보가 위협당하며, 식량과 원자재를 생산하는 능력도 파괴된다." (p.244) 또한 "구매력의 공급을 시장 기구가 관리하게 되면 영리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파산하게 될 것이다. 원시 사회가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화폐의 부족이나 과잉은 경기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것" (p.244)이다.

▶ 즉 "인간 사회는 이제 모든 면에서 경제 체제의 부속물이 되어버렸다." (p.247)

제7장 1795년, 스피넘랜드

▶ 스피넘랜드법이란 "노동자들이 받는 여러 종류의 임금을 부조하는 의미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795년 스피넘랜드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일종의 최저생계 보장제로서, "일정한 품질을 가진 1갤런의 빵덩어리가 가격이 1실링일 때 일하는 빈민들은 모두 본인 몫의 생활비로 주당 3실링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그 자신이나 가족이 직접 노동을 하여 조달하든가 그렇지 못할 경우 빈민 구호 지방세에서 지급되는 수당에 의해서라도 보장받아야 한다." (p.251)

▶ 폴라니가 이 법을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중상주의에 의해 형성된 전국적 국내 시장이 자기 조정이라는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자유노동시장이 가져다 준 경제적 이점은 노동시장으로 인해 생겨난 사회의 파괴를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는 보호 장치를 작동시켜야 했는데 그러한 보호 장치들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경제적 메커니즘의 여러 조건과 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적합한 모습으로 변형되었지만, 시장경제의 자기조정을 침해하여 결국에는 그 체제 자체를 파괴하고 말았다." (p.250) 그 사례가 스피넘랜드 법이었다.

▶ 스피넘랜드법은 최저생계 보장 제도가 가지고 있는 '노동 유인의 약화'라는 결함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되었다. 이 법에 의해서 "임금이 비율표에서 정한 만큼의 가계 소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구호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었고, 따라서 "노동자로서는 임금을 많이 받건 적게 받건 똑같은 수입을 얻게 되었으니 그의 고용주를 만족시켜줄 물질적 이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다.

▶ 또 다른 큰 문제는 스피넘랜드법에 의해 임금의 하락 압력이 발생하면 극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바닥 모르게 처박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빈민 구호세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다(p.254). 한 번 구호를 받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구호로 먹고 살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 결국 스피넘랜드 법은 1832년 개혁 법안과 1834년의 구빈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된다. 이로써 '경쟁적 노동 시장'이 확립될 수 있었고 "모든 생산 요소들과 함께 토지 또한 시장 체제 아래에 조직함으로써 민중들로부터 기존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박탈해버리고 그들 노동의 시장 가치를 빼앗아가는 동시에 또 그들이 생계비를 벌려면 자신들의 노동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p.255)

▶ 노동 유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스피넘랜드 법은 실패한 온정주의적 접근의 대표적 사례이다. 하지만 스피넘랜드 법의 실패가 곧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폴라니의 말처럼 인간의 목숨을 오로지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것은 그 사회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제 8장 스피넘랜드 법 이전의 것들, 스피넘랜드 법의 결과들

8장에서는 스피넘랜드 법이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18세기 후반 영국의 정치사회 상황을 설명한다. 영국의 무역량이 크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실업이 늘어난 것, 종획운동¹⁾과 대불전쟁의 여파 등으로 인해 만약 임금 부조가 없었다면 영국 농촌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빈민들은 기아 선상 아래로 떨어졌으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스피넘랜드 법으로 인해 농장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이 낮아지게 된 것을 통해 부분적으로 노동생산성 저하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고용주들은 공공재산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원조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만 지급해도 되면서 초과 이윤을 뽑아낼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말만 임금 부조와 생존 유지일 뿐, 사실상 1830년대 접어들면 임금 부조에 쓰이는 빈민구호 지방세 총액은 꾸준히 하락했고 국가의 부는 빠르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넘랜드 법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거세어졌는데, 폴라니는 "이는 그 법으로 인해 대중들이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나라 전체의 삶이 마비되고, 특히 산업의 활력 자체가 크게 제약받은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스피넘랜드 법을 짧은 기간 안에 철폐한 중간계급(자본가, 상인계급)은 전대미문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은 비참한 빈곤 속에서 육체적으로 인간 이하가 되고 말았던 것이 스피넘랜드 법이 시행된 40여 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칼 폴라니는 스피넘랜드 법의 실패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질주를 초래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기독교사회가 전통적으로 지녀왔던 사회적 통일성의 관념은 모습을 감추어버렸고, 부유한 자들은 자신들의 동료들 상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생각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스피넘랜드 법의 실패는 자본가들뿐 아니라 지주들, 노동자들, 농민들, 빈민들까지도 "온정주의는 사회악"이라는 잘못된 관념과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했다.

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을 일체의 의혹 없이 밝혀내는 정치경제학

1) 15세기 중엽 이후에 유럽, 특히 영국에서 영주나 대지주가 목축업이나 집약농장을 경영하기 위해 개방지·공동방목지·황무지 등을 돌담·벽·울타리 그밖의 경계표지로 둘러막아 사유지 경계를 뚜렷이 한 것을 말한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도시에 나가서 노동자가 되었다.

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법칙들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은 가슴에서 동정심을 없애 버렸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명목으로 동료 인간들에 대한 연대를 부인해버려야 한다는 무정한 결단이 세속적 종교의 위엄과 휘광을 뒤집은 채 횡행하게 되었다."

이번 장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의 헌법에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 바로 영국의 '정주법의 탄생과 폐지'라 할 수 있다. '인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정주법은 자본가들이 인간이 '노동'을 상품화시키고 실업을 바탕으로 경쟁하게 하여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철폐해야 하는 핵심 대상이었던 것이다.

제 17장 자기 조정 기능, 망가지다

1879~1929년 동안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심도 있게 발전해갔지만, 그 내부에는 강력한 붕괴의 긴장이 잠복하고 있었다. 이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시장경제의 자기조정 기능이 망가졌다는 데 있었다. 시장 사회는 시장 매커니즘의 필요에 사회 전체가 복종하도록 만들어진 사회이다. 따라서 시장 매커니즘의 기능에 부진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 자체에 긴장이 쌓여가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자기조정 시장 체제는 생산이 기본 요소인 토지, 노동, 화폐에 대해서도 시장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마저 시장들이 실제로 작동하게 되면 사회는 파괴의 위협을 받으므로 공동체 스스로 자기 보호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조정 시장 체제는 그러한 기본 요소 시장의 확립을 저지하려 들 것"이고, 그것들이 이미 확립된 상태라면 자유로운 작동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될 것임을 살펴본 바 있다.

당시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경제가 스스로 기능할 능력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폴라니는 미국에서 당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노동, 토지, 화폐가 무한정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사라지게 되자 미국에서도 곧바로 사회 보호가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은 금본위제의 요구와 국내의 지역적 요구를 조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연방준비제도를 수립하였고, 토지와 노동에 대한 보호주의도 뒤이어 나타났다. 뉴딜 정책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폴라니는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19세기에 나타난 노동조합의 탄생과 노동운동의 강력한 저항, 사회주의의 광범위한 확산, 좌우를 막론한 강력한 보호정책의 대두 등을 '집단주의의 음모'라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를 "결과를 원인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즉 보호주의 운동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며 널리 분산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이 시작되고 나면 그 결과로서 그 운동의 지속을 적극적인 자기 이익으로 삼는 집단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개입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국제 차원에서도 시장의 불안정한 자기조정 기능을 보완하는 데에 정치적 방법이 쓰이게 된다.

19장 인민 정부와 시장 경제

이 장에서는 1920년대에 국제 체제가 무너지게 된 후 정부가 인민에게 권력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시작은 스피넘랜드 법으로 시작된다. 스피넘랜드법은 노동 시장 창출을 막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1820년대에는 대외무역 문호가 넓어지면서 단결 금지법이 철폐되고 직업 훈련과 임금 사정을 규제하던 직업법도 폐지되면서 '노동자'의 권익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스피넘랜드법은 이러한 추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노동자들의 정직한 노동을 막고, 독립적인 노동자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점차 바뀌게 되었다. 신규빈법으로 수당체계를 폐지하는 작업을 통해서 '미래사회에서는 노동 시장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없도록 해야한다' 라는 의식이 형성되게끔 한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경제적인 분야의 관점 변화중 하나이다.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1832년 의회 개혁을 통해서 신규빈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빈민 개념이 없어지게 된다. 한마디로 기존의 정직한 빈민, 일하는 빈민의 개념이 사라지고 빈민은 구호 대상 혹은 임금을 위해서 노동하는 노동자로 분류된 것이다. 노동자들은 인격적 예속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지만, 노동 시장에 묶이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다양한 법령들을 제정하여 그들을 노동 시장에 묶었다.

차티스트 운동은 이러한 사회체제를 흔든 사건이다. 상속재산이 없는 이들도 국가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정치와 경제 분리는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사적 소유 제도는 모든 문명의 기초이니 그것을 위협하는 차티스트 운동가들의 청원을 무조건 기각해야 한다'(매콜리 경), '차티스트들이 요구하는 헌장이란 헌법에 대한 탄핵행위'(로버트 필)이라고 그 당시 권력층은 기존의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

헌법에서 규정했던 사적 소유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막는 것은 주로 위로부터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저지르는 행동들에 방향을 맞춘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념은 주로 토지 소유나 상업적 소유를 뜻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는 보호되어야 할 자본은 상업이 아닌 산업 자본으로 바뀌었고, 초점도 인민으로 바뀌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을 분리하여 사적 소유를 보호하면서 보통선거권을 줌으로써 법적 기초를 갖추었다. 그에 반해 영국에서는 노동 계급에게 투표권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 굶주림의 1840년대를 겪고 나고 새로운 세대의 노동자들이 생겨났고, 상층부가 자신들의 노동조합을 발전시키고 나서는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영국 내외의 전투적 자유주의자 들은 인민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통화 문제에서도 반복되었다. 인민들의 개입이 오히려 통화 가치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본 것이다.

1931년 대공황의 발생과 지속적인 금의 유출이 일어나면서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서 실업 수당과 같은 모든 사회적 서비스를 지속하려 했던 노동당은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고 사회적 서비스를 삭감하고 금본위제를 포기하게 된다. 통화의 외환 가치 유지에 임금을 수준을 내리누르는 효과적인 장치였다. 노동조합에 의한 개입주의 정책들은 시장에 득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덧붙여 노동을 상품의 관점으로 보면서 '파업'을 노동이라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동조파업과 총파업을 통해서 사회의 핵심 서비스를 존속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노동 시장의 진정한 기능이 무엇인가와 같은 난제를 야기하게 된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은 크게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적 개입주의 각각으로 나뉘게 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토지, 노동, 화폐 자유에 개입했던 모든 개입주의 정책들을 철회하여 체제의 자기조정을 회복하는 쪽에 노력을 기울였다. 각국 통화 가치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가의 개입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망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신용 메커니즘은 금본위제에 기반한 것이었다. 즉 자연스럽게 통화의 가치가 회복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제네바 회담과 같은 회담들은 그러한 메커니즘을 잘 살린 듯 했지만, 경제 디플레이션을 도구로 살려서 통화 가치를 회복하는 것에는 실패하게 된다. 왜냐하면 각국의 안정적인 경제 균형을 위해서는 독점 품목들의 가격을 낮추고, 노사간 동의 하에 임금 상승의 수준을 맞추며 지대 삭감 등을 위해서 개입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메커니즘은 '강력한 정부' 하에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이는 민주 세력의 약화와 파시즘적인 상황에 일조하였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은 금본위제를 포기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적 접근은 자기조정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적 사회의 접근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서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의 상충은 일시적인 것 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곤 하였다. 노동세력은 선거와 투표에 근거하여 '수'를 무기로 삼아 권력을 호령하였다. 그리고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본질이 흐려지곤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장 사회 변혁과 역사가 맞물려 진행된다.

파시즘은 사회적 상황에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써 나타난 정치운동이었다. 또한 파시즘의 해결 방식은 퇴행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제도적 교착 상태에서 문명의 절멸이라는 탈출구를 제시한 것이다. 파시즘은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 제도들의 뿌리를 흔드는 개혁을 하였지만, 그러한 개혁은 사람들의 지지로부터 초래되었다기보다는 지도자의 특성에 좌지우지된 측면이 강했다. 이러한 의식들은 정당체제에 대한 비판 등의 확산과 민주주의의 틀에 편승하는 세력들을 멸시하는 행태로써 변모하게 되었다. 파시즘 운동에서 민족 문제는 오직 권력 장악을 위한 디딤돌일 뿐이었다.

1920년대에 파시즘은 민족주의적 경향이나 반혁명 경향과 연결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시장 체제의 상태라는 요인이 작용된 것이었다. 파시즘은 위기가 생겼을 때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1929년 자유시장 체제가 위기에 다다르자 기존의 권위주의에만 국한되던 파시즘이 산업 사회의 대안적 해결책으로 나타난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일국 사회주의 노선이란 자유시장 경제가 모든 나라를 연결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자립 능력

을 상실함에 따라서 '자급자족'을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본질에서는 자본주의적 국제주의의 사멸을 담고 있다.

제21장 : 복합사회에서의 자유

19세기의 사회적 역동성을 제공하고 19세기의 사회를 결국 파괴해버렸던 전형적인 긴장과 갈등을 낳았던 것은 조직된 사회적 삶의 기본 요건들과 시장 사이의 갈등이었다. 토지·노동·화폐라는 생산 요소들을 시장에서 하나의 획일적인 활동으로 보는 것은 그 세 가지 모두를 허구적인 상품처럼 다루는 시장 관점에서나 나오는 생각일 뿐이다. 권력과 경제적 가치 평가는 사회 실재의 현실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시장 유토피아를 벗어던지게 되면 우리는 사회 실재의 현실이라는 것과 맞닥뜨리게 된다. 이 사회 실재의 현실이야말로 자유주의를 한편으로 하고 파시즘 및 사회주의를 다른 편으로 갈라놓는 구분선이다. 그리고 파시즘과 사회주의 사이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문제이다. 심지어 파시즘과 사회주의 양쪽이 동일한 경제적 논리를 구사하는 지점에서마저도 각각이 체현하고 있는 원리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실로 상극이 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 둘이 갈라지는 궁극적인 지점은 결국 자유의 문제이다.

사회 실재의 현실을 인정하게 된 후 여기에 파시스트들이 내놓았던 대답은 자유라는 공준을 폐기하자는 것이다. 모든 개개인이 소중하고 독특한 존재이며 온 인류가 하나라는 기독교의 발견은 파시즘에 의해 부정된다. 파시즘이 가지고 있는 퇴행적 성향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파시스트들은 스스로를 체념하여 자유를 포기하고 권력을 사회 실재의 현실로서 찬양하게 된다. 반면 사회주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체념하는 것은 파시스트들과 동일하지만,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한 주장을 드높이 들어올린다. 따라서 사회의 발견은 자유의 종말일 수도 있고 그것의 재탄생일 수도 있다.